

▶ 전북도의회 5분 발언

“도내 농업법인 절반 부실·불법운영”

전북도의회가 8일부터 37일 간의 회기일정으로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발언 등을 정리해본다.

▲송지용 의원
"3000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재평가해야"
송지용 도의원(완주 1)은 10년 동안 3,000억원이 투입되는 동부권 발전사업의 재평가를 전북도에 촉구했다.



송지용 의원

송 의원은 "총 3,000억원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2007년부터 시작된 동부권 발전사업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줄어드는 인구는 멈출 기미가 없고, 경제지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동부권 6개 지역의 인구는 전북 187만 5,000여명의 11.6%에 불과한 21만 7,000여명 수준으로 낙후를 극복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한 것이 동부권 발전사업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부권 발전사업은 계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80억원의 특별회계가 지원된 현장에 다녀왔다는 송 의원은 "수십억원이 지원

송지용 "수십억 지원된 가공시설 가동조차 안 돼"

김대중 "영농조합법인 81곳 목적 외 사업 해"

최인정 "2~3개 폐교를 전제로 학교신설 승인"

된 가공시설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었고, 600억 이상 지원된 사업은 기초 데이터나 관에 필요한 필수 통계도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지역의 동부권 발전사업은 3년간 개인 또는 법인에 32억원이 지원됐지만 사업들로 고용증가가 있었는지, 또 농작물 생산능가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안되고 있는 상태다.

송 의원은 "10년이면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만큼 동부권사업의 방향을 다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도의원 "도내 농업법인 부실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필요해"

김대중 의원은 농림부 조사에서 도내 6,834개 농업법인 가운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52%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농업법인의 20%는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

속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농협회사법인 출자비용 요건을 위반한 곳이 대부분이며 캠핑장이나 오피스텔 임대업,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곳도 81곳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부인의 한 농업법인이 부동산 사업을 한 것이 확인되는 등 부실하고 불법적인 운영이 많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농업법인을 내세워 보조금을 받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김대중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은 이에 따라 적발된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인정 의원 결의안 통해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 마련 촉구

최인정 의원은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의 어수선 경제논리가 도내 학생들 학습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택지개발 지

역 등에 학교설립 시 구도심과 농어촌지역 학교 2~3개의 폐교를 전제로 학교신설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이런 방침으로 올해 전국에서 18개의 학교신설 승인을 받는 대신 49개의 학교가 폐교됐다.

특히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도내에서는 군산 자곡동 도시개발지구 은파중학교, 케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설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전주 예곡시터 지역 학교 등 학교 6개의 학교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져 도내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상황에 처해져 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그동안 농촌과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밀어붙였다"라면서 "그러나 엉뚱하게도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 학교설립에 농어촌지역과 구도심의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시로 벌어지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 마련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학교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정 의원

/고민형 기자

'차대통령 퇴진' ... 전북 서명 7000명 넘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전북 도민들이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 참여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

8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총 7200여명의 도민이 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당초 1만명을 목표로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날이 갈수록 참여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 이번 주 안에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학교 구정문과 전주 송남문화관에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는 주로 대학생과 직장인 등 청년층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고등학생 수백명도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목표치인 1만명을 달성한 뒤에도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

여야, '최순실 게이트' 긴급현안질문 11일 개최

여야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수석간의 이같은 합의내용을 전했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긴급현안질문은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질문자는 야당에서만 12명의 의원들이 나설 예정이다. 전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50여명의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 국민이 궁금해하는 진모를 파악하고 시국수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뉴스

정 의장 "예산부수법안 합의 안되면 관행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 "상임위에서 만약 이게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면 헌법과 국회법상 관행과 양심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부수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날 낮 국회 사랑장에서 '예산 부수법안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그게(예산부수법안 강행 처리) 나오려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급년엔 꼭 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입이 먼저 결정돼야 하니까 매년 여야 합의로 예산 부수법안을 제 때 처리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나오고 나서는 예산 부수법안은 의장이 지정해 처리했다"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부수법안을 꼭 합의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특히 지금 보니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요청한 게 60건인데 의장이 자기 입맛대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면 되겠다"라며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해 처리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의장이 전체를 다 지정하면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중에서 하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수개 법안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는 했지만 결국은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며 "그것을 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예산 부수법안을 의장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임위에서 처리하길 바란다"며 "내가 약역을 피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작년, 재작년과 국회 구성이 달라져 정부도 자기네 주장을 계속할 수 없고 여당도 자기네 뜻대로만 할 수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로"라며 "정부와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노력을 꼭 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

"조윤선 사퇴하라" ...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주하고 조윤선 장관이 주도한 박근혜·최순실판 매카시즘'이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권 임명에 안 맞는 인사들을 좌파로 낙인찍어 몰아내겠다는 반시대적, 반민주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조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문화예술인 죽이기에 앞장섰던 홍희병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앉았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명분은커녕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현 정권의 인사 행태에 할 말이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검찰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전근대적, 반민주적, 반민주적 발상이 발을 못 붙이도록 엄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게다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교감 아래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실재는 그보다 더 썩은 입김이 작용했던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 영역을 억압하고 탄압하려 했다면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스스로 답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뉴스

새누리, 오늘 미 대선 대책 당정협의

새누리당이 오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파장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닉슨쇼크 이상의 파장이 국가 안보, 경제에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오후 미 대선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정회의를 개최해 경제, 외교, 국방분야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클린턴, 트럼프 둘 중 누가 당선되면 미 국민의 변화된 정서에 비추어 불 때 고립과 보호무역 그리고 대북 정책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도 전하고, 변화된 한미관계에 정신 바짝 차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이상호 "박 대통령, 국회추천총리 임명해도 자기가 다 조종할 것"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 추천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자기가 (총리를) 임명해놓고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밑으로 다 조종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되 그 총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려면 박 대통령이 손을 떠난 것이다. (내각 구성 때) 인사는 대통령이 하고 총리가 관할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은 내각지명권을 국회에 주겠다는 것인지, 청와대가 내정에 간섭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의미"라며 "그동안은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이 다해서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말로만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장관도 자기가 임명해서 실질적 조각을 총리가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구성권한을 쥐어 준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조각 때 청와대가 개입 없었다고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총리가 바보가 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각지명권을 준다는 것인지, 청와대가 내정에 간섭 안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우리 (정세균) 의장이 거듭 물어봤는데 분명히 안하고 가버렸다"며 "내각 지명권을 주고 청와대가 내정문제에 간섭 안하겠다고 말 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했다. /뉴스



'이제 물러날까?'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됐다”

도의회 박재만 민주당 원내대표 등 13명 '차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발의

전북도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이 발의됐다.

도의회 박재만(민주당 원내대표) 의원 등 13명은 8일 "현재까지 밝혀진 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국가조직은 물론 기업과 대학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훼손한 행위는

선이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이번 사태는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라면서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트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헌 집권 여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박 대통령과 국회추천총리의 권한 경계는 대통령 의지에 달려... 진통 거듭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해 그에게 내각을 통할할 권한을 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박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는 했으나,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2선 후보'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책임총리가 임명된 이후의 권한 분담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

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회 추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꾸러지더라도 내치와 외치의 경계를 놓고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나누어 가질지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내치와 외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대통령의 권한 이양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결국 총리의 권한 범위는 박 대통령의 권한 위임 의지에 달린 것이다.

내치와 외치의 경계가 모호한 현안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의 경우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안보 사안인 만큼

외치로 볼 수 있지만, 배치 부지를 둘러싼 갈등 등 국내 문제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한·일 정부 간 유안부 합의 등도 외교·안보 사안이라는 하지만 논란이 계속된 사안들이다.

그동안 청와대 주도로 진행됐던 각종 정책을 둘러싼 대립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후 책임총리제를 통한 거국내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진통이 거듭될 개연성이 있다. /뉴스